

## 1990년 6월 6일 제118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 일시: 1990년 6월 6일(수) 오전 10시 개회

○ 발언자:

-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참의원 의원, 헌법민주연합 소속, 1998년 민주당 참의원 의원 회장, 2001년 참의원 부의장, 민주당의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안자, 무라야마 정권의 아시아여성기금 반대 활동)
- 시미즈 쓰타오(清水伝雄) 정부위원(노동성 직업안정국장)
- 사카모토 미소지(坂本三十次) 국무대신(중의원 의원, 내각관방장관, 노동대신)
- 아사노 신지로(淺野信二郎) 정부위원(경찰청장관 관방장)
-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국무대신(중의원 의원, 자유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 문부대신, 자유민주당 총재, 내각총리대신 및 대장대신, 신진당 당수)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1815261X01919900606&spkNum=81&current=17>

○ 해제(개요 및 특징)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국가의 개입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의. 모토오카 의원이 강제연행 중 종군위안부라는 형태로 연행된 사실에 대해 정부 측에 질문하자, 시미즈 정부위원이 위안부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징용이 아니라 업자가 데리고 다닌 것인데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답변함. 모토오카 의원이 강력히 비판하자 위원장이 속기록을 중지시킴. 사카모토 장관이 노동성을 중심으로 관련 성청의 조사를 약속함.

○ 주요 내용 번역

- ▷ **모토오카** “그리고 강제연행 가운데 **종군위안부**라는 형태로 연행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있는데, 맞습니까?”
- ▷ **시미즈 정부위원**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징용의 대상 업무는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총동원 업무입니다. 법률의 각호(各号)에 명시되어있는 업무와 지금 질문하신 **종군위안부** 업무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임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총동원법에 근거한 업무의 하나로 그러한 일을 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 ▷ **모토오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군작업애국단(海軍作業愛国団)이라

든지 남방파견보국단(南方派遣報國團) 혹은 **종군위안부** 등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역사적 사실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벌여서 그 실상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 **시미즈 정부위원** “**종군위안부**라는 것에 대한 당시 관계자의 이야기 등을 종합해 보면, 민간 업자가 그러한 분들을 군과 함께 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벌여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모토오카** “그렇다면 강제연행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께서는 「국가총동원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제시하고 설명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모두 어둠 속에 둔 채로 그런 건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 납득이 안 되네요.”

▷ **시미즈 정부위원** “강제연행이라는 용어의 엄밀한 의미와 내용은 차치하고, 정부가 이해하는 한 강제연행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동원되는 상황에 관한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 **모토오카** “그렇다면 1939년부터 1941년까지 기업이 현지에서 벌인 모집 활동은 강제연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까?”

▷ **시미즈 정부위원** “최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종군위안부**의 실태를 밝히는 일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모토오카** “어디까지 책임지고 하겠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군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안 되겠네요. 할 생각이 있기는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좀 책임지고 대신께서 누구라도 답변하게 하세요.”

▷ **하야시다 위원장** “속기 멈추세요.”

(속기 중지)

▷ **하야시다 위원장** “속기하세요.”

▷ **사카모토 국무대신** “본 건에 대해 정부는 노동성(勞省)을 중심으로 관계 성청이 협력하여 조사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 **모토오카** “지금처럼 노동성의 관리가 와서 찢찢매며 답변하는 이 모습,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과 가이후 총리대신이 전후 문제는 끝났다, 과거는 이걸로 마무리되었다고 했다 하더라도, 조사하면 할수록 전후처리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뢰 관계를 수립하고자 한다면, 강제연행에서 시작된 조선에 대한 여러 식민지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 자신의 손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신뢰 관계라는 건 구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제일 껄뽀한 건 경찰이에요. 『특고월보(特高月報)』라는 자료를 민간에서 전부 내놓고 있습니다. 당시 특고가 달마다 잡지를 간행해서 강제연행을 어느 정도 해왔는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건 경찰의 책임으로서, 민간인조차 자료를 내놓는 마당에 정부 측에서도 응당 이 자료를 입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가져오세요. ('관계 성청에서 한다잖아'라고 외치는 사람 있음) 지금까지의 단계에서 관계 성청(省庁)에 경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 ▷ **아사노 정부위원**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전(戰前)의 『특고월보』 등 내무성 경보국(警保局)에 대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인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접할 기회는 있겠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라고 하며 이 자리에서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협력하겠다고 해야만 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음) 예. 저희도 조사에 대해 협력하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의 자료로서 『특고월보』를 즉각 제시하라고 말씀하셔서 유보적인 답변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로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 **모토오카** “『특고월보』가 실제로 확실히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위원께서는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만 확인해주세요. 『특고월보』라는 것의 존재. 위원께서는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 ▷ **아사노 정부위원** “아직 제가 그러한 자료를 직접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자료 열람이 가능한지는 돌아가서 조사해보도록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제가 바로 확인해드릴 수 없어서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모토오카** “관방장관, 정말 실례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 『특고월보』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장관은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저희에게 그 자료를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 **사카모토 국무대신** “『특고월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료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성청에서 가능한 한 범위를 넓혀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관계 성청(省庁), 창구는 관례대로 노동성이 되겠지만, 전 성청이 협력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자료를 모으고 조사하도록 지시해 두었으니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모토오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기한을 정해보세요, 기한을.”
- ▷ **사카모토 국무대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열심히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한을 정해보라고 하셔도 제가 언제까지라고 답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아무튼 무언가를 숨긴다든지 거짓말을 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려 하고 있으니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 ▷ **모토오카** “그리고 그 외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 본토 내의 노동력 동원 수가 약 480만, 그리고 강제연행이 약 151만, 군의 용인(傭人), 군속으로 약 20~30만, 군대가 23만, 그리고 일본군에 대한 **중군위안부** 7~8만으로, 합계 680~690만이라는 통계가 한국에서는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저희 측에도 입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일본인의 손으로 확실히 해두지 않는다면 일본과 한국 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진정한 신뢰 관계 구축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총리의 결의를 묻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 **가이후 국무대신** “지난번 노태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과거 우리나라의 행위로 인해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경위에 비추어 이를 깊이 반성하고, 저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솔직하게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높게 평가하며, 반성에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과거사에 기인하는 문제는 일단락 짓고,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아시아를 위해 좋은 파트너가 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도 성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능한 한 각 성청의 협력 아래 이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